

“지역특성·인구구조 토대, 소멸극복 정책 세분화를”

전남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토론회
농어촌·도시 이분법 벗어나야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도 마련
김영록 “국가 입법 틀 바꿔야”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인구 변화를 토대로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닌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위원은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에서 2019년 19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2040년에는 150만명선도 붕괴되고 고령 인구는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이 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 대응 역시 인구정책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인구문제의 성격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단순히 사회복지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계적, 행정관리적, 사회적, 산업적, 지역개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책 마련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센터장은 “인구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현황을 유형화하고 정주형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이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 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자체 연구를 추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도 했다. 두 기관은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

응급실 못 가고 119구급대 재이송... 광주·전남 5년간 2500건

전문의 부재... 의료 인프라 열악

광주·전남 지역에서 응급실에 곧장 입원하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건이 지난 5년 동안 25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집계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3만721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차 재이송은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에 달한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 조사 결과 경기 지

역이 9856건(1차 재이송 8769건·2차 재이송 1087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 5685건(1차 재이송 5101건·2차 재이송 584건) 부산 2632건(1차 재이송 2203건·2차 재이송 429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1833건(1차 재이송 1500건·2차 재이송 333건), 광주는 755건(1차 재이송 609건·2차 재이송 146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두 지역의 사례를 더할 경우 2579건(1차 재이송 2109건·2차 재이송 479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최 의원은 구급대가 병원 재이송을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의 부재를 꼽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6703건의 재이송 현황 분석 결과 전문의 부재가 2253건을 기록해 33.6%를 차지했다.

뒤이어 병상 부족이 1303건(19.4%), 환자·보호자 변심 298건(4.4%) 등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시급한 의료 인력 확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당정 “이달초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유일 학교폭력 치유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 센터’가 폐쇄된 것과 관련해서 이달말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은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공감했고, 이를 통해 교실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민간이 협업해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도입 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이해 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폭 피해자를 보다 더 보호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매년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이의 충성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현충일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 우리에게는 선열들이 남기신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을 잊지말고 살아갑시다. ”

송하전업사 대표 박 영 동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8-1(산정동1341-1) 전화 : 061-276-3721 전송 : 061-245-0599, 061-245-0548

(사진설명 : 전쟁기념관 6·25 조형물 호국군상)